

# TRADE BRIEF

## 일본 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그간 한·일간 교역은 양국의 경제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2019년 7월 일본의 3대 소재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해당 품목의 對日 수입이 감소한 반면, 타국에서의 대체 수입 또는 우회수입이 늘어나면서 수입 단가가 상승하고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이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양국간 교역 비중은 '22년 기준 6.0%로 같은 인접국인 중국(21.9%)에 대해서는 물론, 유사한 인접 사례인 프랑스-독일(14.2%), 미국-캐나다(14.9%) 간 교역비중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인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수출입 기업 수가 감소하고 양국간 교역 증가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 두 나라 모두 인접국 간에 경제적 교류와 협력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칩4로 대표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수출규제 해제 조치는 양국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동향분석실 공급망분석팀

김경훈 연구위원 02-6000-5195, khood.kim@kita.or.kr  
도원빈 연구위원 02-6000-5848, wonbin.doh@kita.or.kr

# I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경제적 영향

## < 일본 수출규제 조치 경과 >

- (2019.7.1.)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핵심 산업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기존 포괄수출허가를 개별수출허가로 변경
  - \* 3개 품목 :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 (2019.8.28.) 일본은 수출규제의 근거로 안보상의 이유를 주장하며 한국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관리 우대국)에서 배제
- (2019.9.11.)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 (2023.3.16.)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풀고,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발표
  - 양국은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하기로 합의

● (교역 감소와 수입대체) 일본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조치 이후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의 對日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대체 수입이 증가

● (불화수소) 對세계 및 對日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빠르게 증가

- 수출규제 이전 국내 기업들은 선단공정용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 제품을 사용했으나, 수출규제 이후 수입선을 중국, 대만 등으로 다변화하는 한편 국내산 제품 사용을 확대

\* 對일본 수입비중(%) : ('18)41.9 → ('19)33.2 → ('20)12.9 → ('21)13.4 → ('22)7.7

\* 對중국 수입비중(%) : ('18)52.0 → ('19)50.9 → ('20)74.8 → ('21)70.1 → ('22)80.1

\* 국내기업 슬브레인은 2020년 1월 순도 12나인(99.999999999%)의 액체 초고순도 불화수소 대량생산 능력 확보(국내 수요의 약 70% 대응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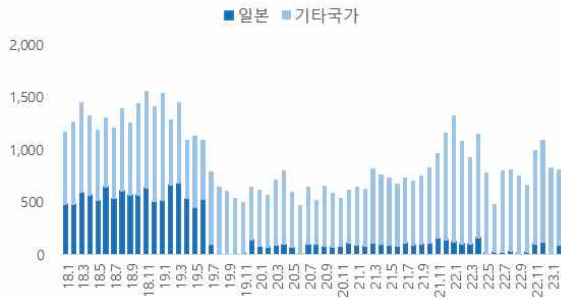
● (포토레지스트) 對日 수입액은 큰 변동 없으나 수입의존도는 소폭 감소했고, 대부분 벨기에 수입으로 전환

- 수출규제 이후 일본으로부터 직접 수입이 까다로워진 국내 기업들이 기존 일본 거래선의 벨기에 소재 합작법인을 통해 우회 조달

\* 對일본 수입비중(%) : ('18)93.2 → ('19)88.3 → ('20)86.5 → ('21)79.3 → ('22)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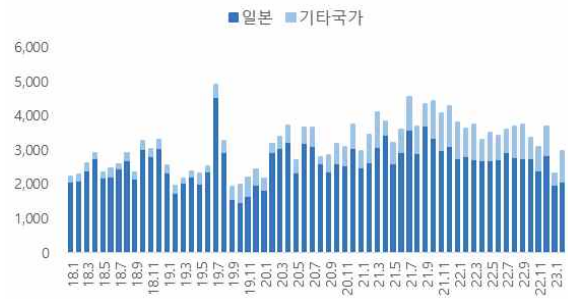
\* 對벨기에 수입비중(%) : ('18)0.8 → ('19)4.6 → ('20)8.3 → ('21)15.8 → ('22)15.7

< 불화수소 월별 수입액 >  
(단위 : 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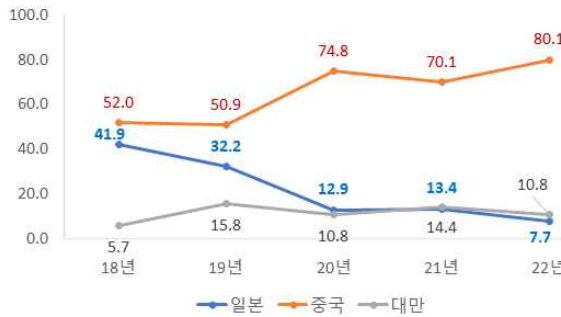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HS 2811111000 기준

< 포토레지스트 월별 수입액 >  
(단위 : 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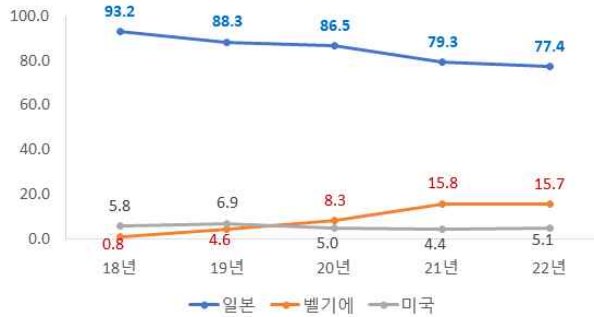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HS 3707901010 기준

< 불화수소 국가별 수입비중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품목별 상위 3대 수입국 대상

< 포토레지스트 국가별 수입비중 >  
(%)



● (불화폴리이미드) 수출규제 시행 전에 이미 상당한 국산화가 이루어졌고, 기업들이 대체소재(투명폴리이미드)를 채택하면서 對日 수입은 크게 감소

- 불화폴리이미드(FPI) 필름은 열안정성과 강도가 우수하지만 가공성이 낮고 특유의 노란색이 있어 최근에는 투명폴리이미드(CPI)로 대체

\*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06년부터 투명폴리이미드 연구에 착수, 2016년 개발을 완료하고 2019년 상반기 부터 양산 개시(연산 100만㎡ 규모)

- 과거 수출입 통계상 2021년까지 기타플라스틱 필름의 HS코드(3920999090)에는 불화폴리이미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필름이 포함

\* 해당 HS코드에 수출규제 대상과 비규제 대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무역통계를 통해 규제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곤란

- 2022년 불화폴리이미드의 HS코드(3920999020)가 새로 신설되었으며 對日 수입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 2022년 불화폴리이미드의 對日 수입액은 2천 달러에 불과(對세계 수입액의 1.5%)

◎ (수입비용 상승) 일본의 수출규제로 수입선을 변경하면서 일부 품목의 수입 단가가 크게 상승해 우리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

● 그간 3개 소재를 국내에서 시험 생산하거나 일본 외 다른 국가에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시간 및 비용 소요

- 2022년 기준 2위 수입국인 벨기에산 포토레지스트의 수입단가는 일본산의 5.4배에 달해 우회 수입에 따른 추가비용이 상당

\* '22년 우리나라의 국가별 포토레지스트 평균수입단가(달러/Kg) : (일본) 366 (벨기에) 1,965

- 일본 수출규제 이후 무역업체들은 ‘대체 수입선 발굴비용 증가(19.1%)’, ‘일본 기업과의 협력 사업 취소(19.1%)’, ‘수입통관 지연(15.9%)’, ‘통관시 서류 요청 증가(10.8%)’ 등의 애로 호소

\* 무역협회 주관 일본 수출규제 피해 설문조사 결과(2019.10, 무역업체 538개사 참여)

● 일본산 제품보다 성능이 낮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불량률이 오르고 운송비 등 원가 상승요인 발생

- 국내 생산에 성공하더라도 對日 수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생산거점 다각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이 용이

◎ (타국의 반사이익) 한·일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 단절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동안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은 반사이익을 누려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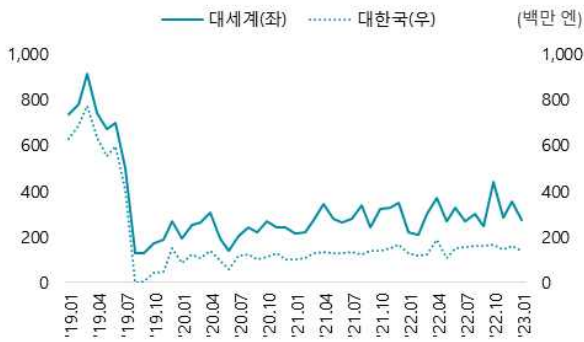
●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의 對한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점유율이 상승

< 일본, 중국, 대만의 불화수소 수출액 및 증감률 >

국가	對세계			對한국		
	2018년	2022년	증감률	2018년	2022년	증감률
일본(백만 엔)	8,387	3,564	△57.5	7,491	1,747	△76.7
중국(백만 달러)	481	500	3.9	114	166	46.4
대만(백만 달러)	27	60	127.9	9	22	141.0

자료 : 한국무역협회(일본, 중국), 대만 통계청

< 일본의 대세계 및 대한국 불화수소 수출 >



< 중국의 대세계 및 대한국 불화수소 수출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는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 기회가 차단된 반면, 대만은 일본과 공급망 협력을 본격화
  - 대만의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1조 1500억 엔(약 10조 4천억 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며, 일본 정부는 TSMC에 4천760억 엔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
- ◎ (효율적 자원배분 저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과거 수입선다변화 정책과 같이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왜곡시켜 경제의 효율성 저해

< 수입선다변화 정책(1978~1999) >

- (의미) 무역역조 완화 및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일본)에서 수입되는 품목 중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이 가능한 품목들을 지정해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 (연혁) 1978년 3월 <무역진흥확대회의>에서 대외개방조치의 보완책으로 도입되어 1999년 6월까지 시행
  - \* 품목수 : ('78)106개 → ('81)924개 → ('88)344개 → ('92)258개 → ('97)127개 → ('98)88개 → ('99)폐지
  - \* 대상 : 자동차, 굴삭기, 기계류, 가전(TV, VCR,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시계 등
- (효과) 특정 산업 보호에 따른 불공정 관행 심화, 외국산 제품의 수입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의 감소,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 등 시장 왜곡 발생
  -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이후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우리 가전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져 내수 판매는 물론 수출도 증가
  - 해당 품목의 대일 수입은 다소 증가했으나, 우리 제품의 경쟁력도 같이 높아지면서 대세계 무역흑자가 대일 무역적자를 상쇄

< 대일본 및 대세계 무역수지 변화 >

(단위 : 억 달러)

연도	1980	1985	1987	1990	1993	1997	2000	2003	2004	2005
전체 무역수지(A)	△48	△8	63	△48	△16	△84	118	150	293	232
대일 무역수지(B)	△29	△31	△53	△60	△84	△131	△113	△190	△244	△244
B/A×100(%)	59	354	△83	123	540	155	△96	△127	△83	△105

## II 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기대효과

◎ 그간 한·일간 교역은 양국의 경제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가 지속

● (교역 비중) '22년 기준 일본과의 교역 비중은 같은 인접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물론, 유사한 인접 사례인 프랑스-독일, 미국-캐나다 간 교역비중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음

- \* 한국과 인접국과의 교역비중(%) : (중국) 21.9 (일본) 6.0
- \* 프랑스와 인접국과의 교역비중(%) : (독일) 14.2 (벨기에) 9.8
- \* 미국과 인접국과의 교역비중(%) : (캐나다) 14.9, (멕시코) 14.7

- '00년 15.7%(2위)에 달했던 일본과의 교역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2년에는 베트남(6.2%) 보다도 낮은 6.0%(4위) 기록

● (수출입 기업 수) 對日 수출입 기업 수와 비중은 '18년 이후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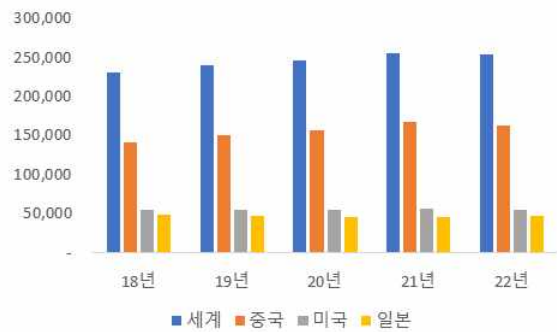
- \* 對日 수출입 기업수 : ('18)47,928 → ('19)46,936 → ('20)45,684 → ('21)45,983 → ('22)46,346
- \* 對日 수출입 기업 비중(%) : ('18)20.8 → ('19)19.6 → ('20)18.6 → ('21)18.0 → ('22)18.3

< 주요국의 인접국과의 교역비중('22년)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입 기업 수 > (개)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교역 증가율) 지난 4년간(2019~2022)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평균 교역 증가율(0.1%)은 주요 교역 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 '19~'22년간 국가별 연평균 교역증가율(%) : (일본) 0.1 vs (미국) 9.8 (베트남) 6.5 (중국) 3.7

● (정상외교) 일본은 세계 3위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의 4대 수출국, 3대 수입국으로 경제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임에도 그간 정상간 교류가 미흡했음

- \* 최근 10년간 국가별 정상 해외순방, 국빈방문, 화상정상회담 건수 : (일본) 1회 vs (미국) 8회, (중국) 6회, (베트남) 6회, (인도네시아) 5회

- ◎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역과 경제협력이 정상화되어 인접국 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 (교역) 일본 수출규제 해제를 계기로 해당 소재·부품 뿐만 아니라 K-콘텐츠, 소비재 등 양국간 교역이 활성화될 전망
  - (비용 절감) 수입선 전환, 신규 조달처 물색 등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이미 품질이 검증된 일본 제품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효율성 제고
  - (절차 간소화) 수출규제 해제로 구비 서류가 간소화되고 기존 90일 가량 소요되던 전략물자의 수출신고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신고 절차 >

구분			그룹A(백색국가)	그룹B(한국)	
리스트 규제	전략물자 (1120개)	민감품목 (263개)	개별허가		
		비민감품목 (857개)	허가 종류	일반포괄허가	개별허가 특별일반포괄허가
			유효기간	통상 3년	통상 6개월
			처리기간	1주일 이내	90일 이내
	제출서류	2종	3~9종		
캐치올 규제	비전략물자		캐치올 통제 미적용	캐치올 통제 적용 (통제여건 해당시)	

자료 :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1년의 평가와 전망(2020),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 일반포괄허가 : 수출기업은 개별허가의 취득 불필요
- \* 개별허가 : 건별 허가 필요, 3개 수입규제 조치 품목이 이에 해당됨
- \* 특별일반포괄허가 : 일본 수출규제 내부준수프로그램(ICP)이라는 수출인증서를 획득한 기업만 해당되며, 수출기업은 개별허가의 취득이 불필요하나 취득 시 수출관리 내부규정의 정비 등이 요구됨
- \* 캐치올 규제란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군사용도 전용을 인지하거나 일본 정부가 상황에 따라 필요시 수출자에게 통보(inform)하는 방식의 규제임

- (경제협력)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경제 분야 장관급 협력 채널이 복원되고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도 급물살을 탈 전망
  -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23.3.17)에서 양국 경제계는 △교역 및 투자 확대, △제3국 공동진출, △디지털·그린 등 신산업 협력 강화, △자원 무기화에 대한 공동 대응 등에 적극 협력키로 뜻을 모았음
- (반도체) 칩4로 대표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메모리반도체에 강점을 갖춘 한국과 반도체 소재·장비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일본이 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 가능

### Ⅲ 시사점

- ◎ 일본의 수출규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닥치기 전에 우리에게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상징적인 사건임
  -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민간 협력을 통해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고 소재 국산화에도 진전을 이뤄냈음
- ◎ 그러나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로 인한 반도체 공급망 교란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동안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은 반사이익을 취해 왔음
  - 반도체 분야의 첨단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고품질의 일본 제품 수급이 원활해지는 것은 우리 기업의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바람직
- ◎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 교역 증진뿐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의 투자 및 협력이 늘어나 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 칩4로 대표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수출규제 해제 조치는 한·일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
- ◎ 다만, 일본 수출규제가 해제되더라도 국내 소부장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투자는 계속될 필요
  - 일본 수출규제 해제로 단기적으로는 국내 소부장 기업들과 일본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나,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인위적인 경쟁 제한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방해가 될 우려
  - 경제안보 및 반도체 생태계 육성 차원에서 소부장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인 R&D 혁신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